

핫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PEC 참석차 오늘 출국

자유무역·국제연대 강조 북한·러시아에 강한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를 의제로 15~17일(현지시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아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연대·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보도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태 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돈·데이터가 단절 없이 흘러 다니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6일 미국 주도의 경제협약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경제 협의회 성격이 큰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방미 기간에 CEO 서밋,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첨단산업 기업 투자신고식 등을 통해 각국 정상 및 세계 리더들과 활발히 교류할 예정이다.

APEC 정상외교와 맞물려 관심을 끄는 것은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다.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한중 정상이 다시 마주 앉게 되면 양국 관계 발전, 특히 경제적·인적 교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선관위 사무원 '수개표' 도입 검토

투표지 육안 심사 강화 내년 총선 개표 때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사실상 '수(手)개표'를 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직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부 다시 육안으로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로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육안 심사계수기로 다시 확인하고 있다. 개표사무원은 심사계수기를 돌릴 때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 이용 이후 심사계수기 이용 이전의 중간 단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현행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 등의 도용이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산된 이미지는 원본도 보존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별도 저장 매체에 백업하고 원본은 삭제했다.

전자 투표용지는 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연협뉴스)

동인천역 주변 전면 개발 '속도'

도시재생활성화 취소 신청 제물포네상스 연계 추진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제물포네상스와 연계한 동인천역 주변 전면 개발에 본격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취소를 신청했고 인천도시공사가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동인천역 주변 전면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동인천역 주변 지역은 과거 인천 경제활동의 중심지였으나 1990년대 이후 도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쇠퇴해 동인천역 주변 활성화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했으나 경기 침체 및 사업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으나 광장 축소와 행복주택 반대, 전면 개발 요구 등으로 사업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역 내 반대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 제물포네상스와 연계한 원도심 거점개발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취소하고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9월에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는 등 전면 개발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관



인천시가 동인천역 주변 전면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인천시)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 수립, 인천도시공사의 신규사업 참여 확정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갖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복합개발사업이 시

행되면 주변 지역까지 활성화되는 확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동인천역 주변 전면 개발을 통해 초일류도시 인천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경기도 식중독 예방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식중독 예방 컨설팅 초과 달성 현장대응 모의훈련 등 '호평'

경기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3년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최우수기관 상은 식약처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분야 5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로 △식중독 발생 관리율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 관리율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비율 △식중독 모의훈련 참여

도 △식중독예방 컨설팅 등의 실적을 고려해 선정한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2곳, 기초자치단체 18곳, 보건환경연구원 1곳 등 21개(최우수 2, 우수 19) 기관을 선정한다.

경기도는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모든 시군에서 신속보고 및 현장대응 모의훈련 진행, 식중독 예방 컨설팅 116% 초과 달성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유치원·어

린이집, 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위생취약시설,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 합동 위생점검, 조리식품 수거 등을 추진했다.

식중독 예방 신속보고 모의훈련은 식중독 발생을 가정해 발생 사실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담당 기관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다. 현장대응 모의훈련은 식중독 발생 장소에 유관 기관들이 모여 대책회의 등 식중독 발생에 대응하는 훈련이다. 모의훈련은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이 적극 참여했으며 식중독 예방관리의 초

석을 다졌다. 식중독 예방 컨설팅에도 관심을 기울여 집단급식소, 일반·휴게음식점 1천 271개소 초과(116%) 달성 등 식중독 예방사업 성과를 높였다. 올해에는 용인시 등 12개 시군 군부대까지 확대해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했다.

인천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식품 안전에 기분이 되는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물로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저감화에 힘써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인천시의회 "인천고법 법률안 통과해야"

이단비·신성영 시의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국·부평3)·신성영(중구2)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이단비·신성영 의원은 조용주 변호사 등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

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데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영 의원은 "인천지역 내 고

등법원이 없어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들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반드시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제28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실·국회·법무부장관 등에 전달했다.

또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8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는 등 고등법원 설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인천시민 110만 서명운



이단비·신성영 인천시의회 의원이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인천시의회)

동을 통해 받은 명부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천 고등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APEC 정상회의 도전 100만 서명운동... 공감 확산

인천광역시 오는 2025년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인천시는 시의회, 군·구, 유관기관 등 42명이 참여하는 'APEC 인천 유치 지원 TF'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는 물론, 인천 유치의 당위성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공모신청서를 준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인천시는 △청년·대학생·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인천 글로벌 서포터스'의 온라인 홍보 △유치 홍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카드뉴스 제공과 다양한 이벤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주한 공관장 초청 간담회 및 팸투어 △시민(단체)의 릴레이 지지 △KTIX·인천국제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 △대형행사 연계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유치 활

동을 펼쳐 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111만16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성과를 이뤘고 10일 유정복 시장은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원이 담긴 100만 서명 증서를 전달했다.

다음달 정상회의 개최도시 공모 신청서 접수 시 서명 증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구 권위자인 비노드 아가왈(Vinod Aggarwal)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 교수는 "전환기를 맞은 APEC: 기원, 진화 그리고 전망'(APEC in Transition: Origins, Evolution, and Prospects)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역사와 발전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아가왈 교수는 "인천은



지난 6월2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 글로벌 서포터스' 발대식.

(사진=인천시)

최대규모의 경제자유지역을 보유한 투자의 요충지이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상회의 유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누고 인천 유치 전략을 알리기 위해 지난달 열린 'APEC과 글로벌 인천'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약 2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경제 유발과 2만여 명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상회의 유치를 위해 인천시는 국제회의 유치 전문대행사를 선정해 유치 성공 전략 방안 마련에 힘 쏟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외교부 개최 도시 선정위원회 현장실사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차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다음달부터 외교부에서 진행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절차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모일 곳은 준비된 국제도시 인천뿐"이라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